

문화콘텐츠기술원 왜 광주에 설립해야 하나

문화기술·산업화 이끌 문화수도 핵심 기관

전문가들 “불발뎀 靑문화수도 사업 차질”

연 평균 예산 900억·수천명 고용창출 효과

새 정부 출범 초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위원회 폐지 방침에 이어 최근 광주문화수도의 핵심사업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 설립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 전문가와 학계·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통·폐합과 무관하게 CT연구원은 광주에 설립돼야 하며, 정부 조치로 CT연구원과 유사한 기관이 설립될 경우에도 그 기관은 광주에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T 연구원은 어떤 기관=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발표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광주 문화수도만을 위한 특별 기관이다.

정부 설립안에 따르면 CT연구원 설립은 부지 10만㎡, 연면적 4만1천㎡ 규모에 국비 1천20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2009년 착공, 2011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CT연구원의 가장 주목받는 기능은 아시아 문화전당의 취약한 부문인 문

화기술·연구·상품화 기능을 확충할 기관이라는 점이다. CT연구원은 세계 유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업체들과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을 펼치는 한편, 그 작업을 우리 지역에서 진행함으로써 아시아 문화산업 허브(Hub)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CT연구원은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연 평균 정부예산 900여억원이 지원되는 국가기관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이다.

◇지역 반발 확산=새정부는 조직 슬림화 정책에 따라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통·폐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작업과 함께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의 ‘CT연구원 설립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CT연구원은 광주를 포함해 전국 어느 도시에도 들어설 수 있어 광주문화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을 포함해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들이 CT연구원의 파급효과를 주목, 몰입 유치작업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정부의 유사 기관 통·폐합 조치와 무관하게 CT연구원은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부 방침으로 CT연구원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 생겨

라도 그 입지는 ‘광주’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CT연구원 설립지원위원회는 21일 국회위원을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부 방침으로 CT연구원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 생겨

김상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은 “CT연구원이 광주에 세워지지 않을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며 “문화중심도시의 유력한 수익 모델을 벌, 의원들을 상대로 CT연구원 광주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토론 회 개최를 제안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18일 독도 주민 김성도씨가 고기를 잡기 위해 출항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독도 유인도화’ 대책에는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관광상품개발 등을 비롯해 독도종합해양기지 건립, 서도의 어업인 숙소 조성 등 정부축이 마련한 방안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98년 2차 협정 독도 ‘중간수역’

일본에 영유권 주장 빌미 줬다

한일 어업협정 또 논란 왜

일본의 교과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로 지난 98년 체결한 2차 한일 어업협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협정에서 정부가 독도를 우리 배타적 수역의 기점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완충지대 성격의 ‘중간수역’에 두는데 합의함에 따라 이후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98년 어업협정으로 양국 조업구역 설정=한·일 두 나라는 지금까지 동해상 조업구역 설정을 위해 두 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1965년 체결된 1차 협정은 각국 연안 12해리까지의 어업전관수역(배타적 수역)을 인정했다. 그러나 1994년 유엔(UN)해양법협약 발효와 함께 세계적으로 ‘연안 200해리’ 범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적용되면서, 한·일 조업구역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두 나라 사이 해역의 거리가 400해리(200+200)에 크게 못 미쳐, 동해 대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EEZ가 겹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1996년 일방적으로 200해리 EEZ를 선포했고, 두 나라는 97~98년 15차례의 공식 협정을 거쳐 1998년 11월 2차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다. 이듬해인 1999년 1월22일부터 발효된 이른바 신(新)한일 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대륙붕선을 따라 그은 선을 EEZ로 간주하되 동경 130~135도, 북위 35~38도에 걸친 동해 일부분을

‘중간 수역’으로 뒀다. 중간 수역에서 양국 어선은 자유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뒀다’=문제는 독도의 위치다. 한·일 어업협정상 독도는 현재 ‘중간 수역’ 안에 놓여있다. 정부는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더라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므로 섬 주변 12해리 영해 안에서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측과 합의한 내용이 아닌만큼 어업협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 등은 1998년 어업협정 타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영토인 섬이 아니라 암초로 간주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협정 개편 우리 손실 더 커”=일 전라에 말리는 것”=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어업협정은 조업구역 설정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어업협정 15조에서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계약국의 입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만큼,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실의 측면에서도 협정 파기가 우리 측에 이롭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어업협정과 같은 질서를 깨고 분쟁을 부추기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영유권 전략이라는 점이다.

/연합뉴스

독도 유인도화·금강산 강경 선회

정부가 한나라당이 2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태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독도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 두 사안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데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독도를 유인도로=독도 유인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당정회의에서는 우선 독도 영토수호를 위해 올해 8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5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높은 파도가 치는 등 안전 후속에서도 출항이 가능하고, 독도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160급 이상의 ‘독도 관리선’을 건조, 독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여기에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와 독도 어업실태 및 수산자원 조사, 독도의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

독도에 해양기지 건립·해병대 배치 검토

대북 정보수집 강화·개성관광 안전책 우선

비, 독도 홍보 책자 발간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도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독도 유인도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 사랑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신설 ▲어업인 숙소 건립 등을 제안했다. 당측에서는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흡기 건립을 비롯한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특히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견지해온

‘온건한 외교’를 탈피하기로 했다.

◇대북 정보시스템 정비=현재 대북 정보과 악 및 위기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간서 대북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군은 군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 정세를 정확하게 취합하는 시스템을 빨리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원활한 대북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대 아산에 의존하던 대북정보 수집을 정부 중심의

정보라인을 구축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 주도로 금강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관광객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포괄적 신변안전각서’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성관광 역시 남한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느냐 여부에 따라 향후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쇠고기·금강산·독도문제 등 야권, 여권 실정 대대적 공세

야권이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 “여권이 정권 초기부터 국정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대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미곡산 쇠고기 협상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불러온 데 이어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독도 문제, 서울시의회 뇌물사건, YTN 사장 및 KBS 이사 인선 논란 등 일련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여권의 대대적인 사회정책 제시를 요구했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구두논쟁에서 서울시의회 뇌물사건과 관련, “경찰은 지방자치체 회생을

위해 대청소하는 심정으로 지역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내용 없는 강경책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중요한다. 정부와 청와대, 주일대사가 모두 엮여야 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두자녀는 행복을!
3자녀는 번영을!

누구나 행복하는 만큼 아이들 날마다
누구나 번영을 이루기 위해 부모가 가져야 할
일과 기쁨이 함께하는 행복한 행복의
모든 대역들이 바로 행복의 꿈을 키우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출산·양육후원협의회